

황금을 캐려는 벤처기업의 근원

최근 국내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벤처기업 창업 열풍이 일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저마다 독특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내 연구소들의 기술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기술개발 자체로 끝마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 기술이전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독자적으로 기술이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민간기관에서도 많은 기술이전 업체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술이전 시장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 박명규/도원컨설팅 기술이전팀(tech@dowon.com)



위스의 세계적 경영평가연구소(IMD)의 보고서인 '99년 세계 국가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총 조사 대상국가 47개국 중 7위로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국가 기술경쟁력은 28위로 경쟁 대상국인 대만의 7위, 싱가포르의 13위에도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연구과제 선정과정이나 개발결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연구비를 마구 쓴데도 원인이 있지만 국책개발기술과제가 민간기업에 이전돼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전 환경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기술이전이란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기에는 비용이나 기간에 있어서 그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문 연구 기관이나 대학 또는 기술 선진국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상품화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술이전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 출연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독자적으로 기술이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에서도 많은 기술이전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국가 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기술이전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이 성사된 건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의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인 일반기업이나 연구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이전 기관

정부 출연기관

현재 국내 기술이전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은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표>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

기관명	내용
산업기술정보원(KINITI)	한일테크노마트 주최, WTA 대전테크노마트 주관 http://ktm.kiniti.re.kr/tm_main/main.htm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산업계의 에로기술지원과 기술이전 http://www.etri.re.kr/tech.html
신기술창업지원단(HTVC)	기술집약적 신생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입주시켜 경쟁력 향상과 벤처 창업지원 http://htvc.kaist.ac.kr , T. 042-869-4781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기술인력 및 기술평가, 해외기술협력체계활용, 산업기술대전주최 http://mail.itep.re.kr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	Korean Marketplace http://www.smipc.or.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신기술복터방 http://ctc.kitech.re.kr:8000/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기술지원사업 http://www.kfri.re.kr , T. 0342-780-9114
기계연구원(ICOMM)	자본제산업 전문기술정보센터 http://rinnnet.kimm.re.kr , T. 0551-280-323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ITA)	기술이전 목록제공 http://kita.technet.or.kr/kita/korean/index5.htm
한국전자통신엔지니어링(EESI)	사이버 기술시장 http://www.eteresi.co.kr , T. 042-864-23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술플라자 운영 http://www.kotra.co.kr/kti/kt-i-main.html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과학 기술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부 출연기관에서 기술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업무의 과잉 중복 투자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중복 다원화된 기술이전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 의원 입법형태로 “기술이전 촉진법(안)”을 제정하고 현재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기술이전 촉진법의 내용은 기술이전 촉진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전문기들로 기술이전정책심의회를 설립하는 한편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기술거래소” 설립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술이전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기술평가기관과 평가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일정비율을 기술이전사업비로 우선 확보하도록 하고 기술이전 관련정보의 체계적 유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술이전 촉진법(안)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그 실행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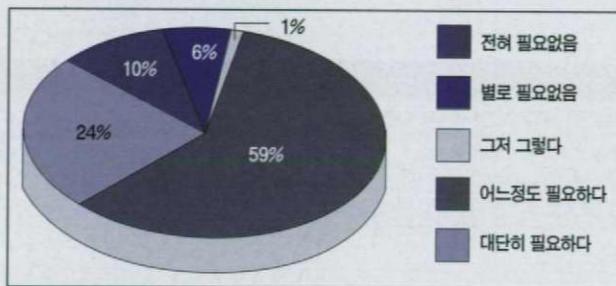
기술이전의 촉진과 활성화란 결국 연구원들에게 기술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감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민간에 이양시켜 그 이익을 극대화 시킨다는 가장 원칙적인 목적에 충실히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술이전촉진법은 연구원들의 연구의욕 고취와는 관계없이 연구성과의 확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이 거래되도록 돋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기술거래소나 기술거래사제도 등을 명시하여 자칫 자유로운 시장형성을 왜곡하거나 않을까 우려된다.

기술이전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DB나 각종 기술이전 박람회 등 기본적인 기술이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회수가 어려운 기술이전인프라 구축은 민간업체가 할 수 없는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즉 정부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현재 각 정부 출연기관에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술이전DB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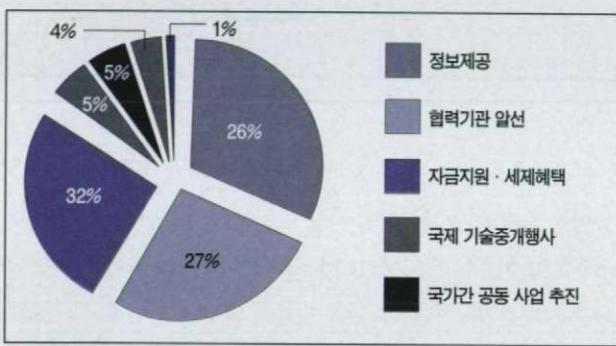
그러나 정부 출연기관들에서 기술이전 DB 구축이외에 기술이전 중계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 한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이며





〈그림 1〉 국내 기업들의 기술협력 필요성

* ITEP에서 96년 2월 국내 중소기업 495개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협력 수요조사를 근거로 한 자료임



〈그림 2〉 국내 기업들이 바라는 기술이전 지원시책

* ITEP에서 96년 2월 국내 중소기업 550여 업체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내용으로 정부 및 관련단체에 바라는 지원내용임

결국 공공기관의 비효율성만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술이전 중계는 치열한 생존법칙과 시장원리에 단련된 민간 기업의 역할이지 결코 공공기관이 참여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기관

민간단체나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그림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없고 우리보다 그 역사가 깊은 기술 선진국에서도 기술이전 중계업체가 기술이전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심히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다.

국내 대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기술이전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전담 기술이전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결국 국내 기술이전 중계시장은 중소기업과 기술이전 부서를 별도로 구비하지 못한 일부 대기업으로 그 시장이 한정된다.

또한 국내기업 풍토가 기업 내부의 사정을 외부업체에게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외

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체직원을 선별 교육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쪽을 선호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국내 기업환경에서 기술도입비용을 지불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에 별도의 중계수수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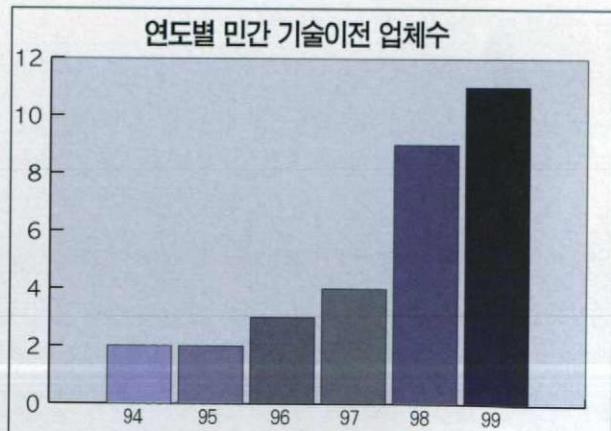
국내 기업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현재 민간 기술이전업체들의 기술분석, 평가 및 시장성 조사 등에 대한 수준이 낮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국내에는 이렇다 할 만한 기술 평가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어느 특정한 기술의 가치평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것이고 또한 모든 기술에 대해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다. 결국 기술의 평가란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등 다방면에 걸친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는 노하우를 통해 접근되어야 할 고도의 지적작업이다.

기술 선진국들의 기술평가 방법이나 노하우를 도입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정착시키는 방법은 국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 NTTC(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에서 제공하는 기술평가방법인 Top Index는 연구의 대상이 될 만 하다.

NTTC는 원래 미국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자금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미국 의회가 1989년 설립한 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기술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 Top Index이다.

톱인덱스는 모두 11가지 평가항목을 두고 항목마다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해 놓았다. 지표마다 0에서 10까지의 척도가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평가대상인 기술의 총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파악



〈그림 3〉 연도별 민간 기술이전 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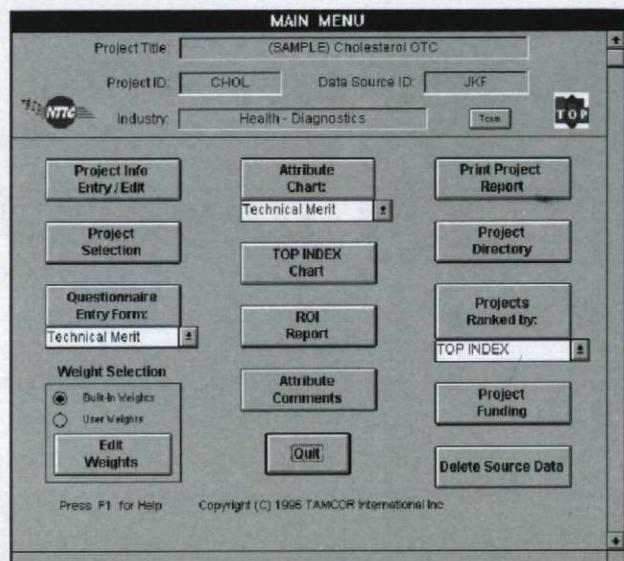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기술평가 프로그램이 국내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과 민간업체들의 풍부한 노하우가 결합되고 또 기술이전시장에서 검증될 때 국내 기술이전 시장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결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술대국으로서의 씨를 뿌리는 일이라면 기술이전은 맷은 열매를 배분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국내 산업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목표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다.

국가공공기관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계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민간업체들의 축적된 노하우가 결합되어 기술시장에서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공인될 때 대한민국도 기술선진국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Top Index 프로그램의 초기화면

연간 3조원이란 연구개발비가 투자되면서도 국가 경쟁력은 여타 경쟁국보다도 뒤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정기구독안내

1. 구독신청방법

- 일단, 02-725-3751(ext 118)번으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은행구좌로 구독료를 입금하신 다음 데이터베이스월드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 구독자 또는 구독기관명, 구독기간, 책을 받아보실 주소, 신청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02-725-3750번 팩스로 넣어주셔도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3. 정기구독료

6개월 : 24,000원

1년 : 44,000원

2년 : 88,000원

※ 권당 가격은 4,000원입니다.

※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편안히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구독료 입금계좌

조흥은행 수송동지점 390-03-003978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023-25-0008-729
※ 예금주 : 한국DB진흥센터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6층

데이터베이스월드
The Database World